재개발 때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 자격 추진

광주일보 보도 이후 후속 조치

2021년 02월 26일 06면 (사회)

光州日報

조합설립 후에도 다주택자 분양권 각각 인정 잇단 판결

재건축·재개발사업 투기 조장 우려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파문'

실에서 당했다" 신고…광주동부경찰 수사 착수

야 할 법률대리인이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물의'

'분양 자격 확대 투기 조장 우려' 국회 보완 대책 마련키로

'국선변호사 일탈 행위' 법무부 첫 실태조사 등 제도 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을 확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 〈광주일보 2월 26일 6면〉과 관련, 국회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선변호사의 위법·일탈 행위 〈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에 대한 법무부의 첫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8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시장 안팎에서 나오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우려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소 의원측 설명이다.

법원이 기존 법제처 유권 해석과 달리,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소 의원 지적이다.

최근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조합 설립인가(2007년 8월 29일) 이후 개발구역 내 다세대주택 중 한 개를 구입한 뒤 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조합원이 낸 소송에서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가 지난해 1월 학동 4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분양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비슷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관련 판결에 대한 본보 보도로 조합설립 인가 후 개발구역 내 집을 산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만 받은 채 이주했던 기존과 달리, 분양받는 게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기존 법제처 해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광주 법원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 자격을 주도록 법문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법무부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변호사가 구속된 바 있다. 이외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해 법무부로부터 최근 '조만간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자격 박탈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다문화교육 이수 의무화

전남 모든 학생·교직원 대상

올해부터 전남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들은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전남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지난해 56개교에서 59개교로 늘렸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전남 다문화 교육 진흥계획'을 8일 발표했다.

진흥계획에 따르면 중도입국생 중심이었던 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다문화가정 전체 유치원생으로 확대한다.

특히 입국 초기(한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 학생이 많은 9개교에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인 한국어 학급을 설치해 한국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중도입국생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학생에 대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제 확대 ▲중도입국생 담임들에 대한 맞춤형 연수 실시 ▲다문화 학생에게 다국어 통번역 자료 제공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가정 방문 강사제 실시 등을 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남 전체 학생 수는 약 12% 줄어든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8% 늘었다"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유흥·숙박업소 많은 곳 성범죄도 많다

광주의 성범죄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유흥·숙박업소가 밀집한 곳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의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젠더 브리프'(Gender Brief)에 따르면 2015~2019년 광주 경찰청과 산하 5개 경찰서에서 고소·고발·112신고 등으로 접수·처리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3980건으로, 이들 사건의 다발지역은 유흥·숙박업소 일대였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이 42.1%를 차지했으며 강간(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5.5%), 준강간(4.2%) 등 순으로 많았다.

광주 95개 행정 동 가운데 치평동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용봉동(143건), 동구 충장동(138건), 광산구 첨단2동(135건), 광산구 수완동(125건), 광산구 우산동(124건), 동구 서남동(120건), 서구 상무1동(119) 등 모두 8곳이 연평균 20건 이상이었다.

이밖에 광주 경찰청의 2019년 112여성폭력 범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간이나 강제추행 발생이 많았던 장소는 노상(123건), 유흥업소(97건), 아파트(80건), 다세대·원룸·연립주택(78건), 숙박업소(62건) 등이었다.

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낡고 으슥한 지역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유흥업소 주변의 범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룸촌과 유흥업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가 건물 내 화장실, 간판, 조명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 공유 주차장 실시간 확인 시스템 만든다

광주 남구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내 공영 주차장 42곳의 1500개 주차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구는 8일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공유 주차 시스템을 통한 공간 나눔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사업 등 체감도가 높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관내 공영 주차장 42곳의 1500개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비대면으로 사전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 8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2021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여성 선언문을 낭독한 후 장미꽃을 드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